

독일 대학교육의 변화와 개혁¹⁾

황 승 연 경희대 사회과학부 교수

오늘날 대학의 개혁과 구조조정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지난 수세기 동안 학문적 리더십을 갖고 있던 독일의 대학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 글에서는 독일 대학들이 어떻게 근대 대학의 전형들을 만들어 왔으며 현재는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개혁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나라 대학의 개혁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독일 대학의 이상과 발전

독일에서의 '대학개혁'은 중세시대의 대학으로부터의 개혁을 말하는 것으로, 약 200년 전 훔볼트(Wilhelm von Humboldt)에 의해 도입되고 제창된 개혁정신에 따라 현재 베를린의 훔볼트대학의 전신인 프로이센의 베를린 대학교의 시작으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 개혁은 근본적으로 신휴머니즘과 칸트, 피히테, 헤겔 등

으로 대표되는 독일의 이상주의 사상에 기초해 있으며, 무엇보다도 학문의 자발적인 연구를 통한 인격 계발에 그 취지를 두었다. 바로 중세의 스킨라적 학문 이해나 연구자세로부터 탈피하여 이성의 자율적인 활동에 근거한 학문연구를 주장한 것으로 계몽주의적 사고의 실현과 일맥상통하다. 끝없이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자세,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연구와 비판 위에서 지식을 터득하려는 자세가 바로 그것이었다. 대학개혁은 이렇게 학업이라는 개념의 변화를 말하는 것인데, 대학에서의 학업은 인간 생활의 다양한 분야까지 지성적 토양을 제공하는 것이며, 세계를 지성적으로 정복하기 위한 탐구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인식의 변화였다.

이러한 사고는 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독일 전역에 확산되어 실로 독일의 학문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격상시켰고 차차 세계 여러 나라의 대학들도 수용하게 되어 독일의 대학은 세계적으로 그 정형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러한 훔볼트적 대학들의 중요한 특징은 연구와 교육

1) 이 논문은 1997년 11월 경희대학교 아태지역 연구원이 주관한 "통일후의 청소년문제" 한독 국제학술세미나에 초청받은 독일의 자이브뤼겐 대학의 코르나트(Prof. Dr. H.-J. Kornadt) 교수가 특별 분과에서 발표한 "독일 대학의 발전과 현재의 개혁과정"이라는 논문을 중심으로 골격을 잡아 쓰여졌고, 최근의 자료는 시사주간지 *Der Spiegel* 19/1998호의 94~117쪽 "유럽 대학평가와 독일 대학의 문제"와 동 주간지의 일련의 시리즈인 *Spiegel-Serie: Studieren ohne Grenzen*에서 얻었고, 또 인터넷 (www.spiegel.de/unispiegel)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글을 쓰기 위해 비교적 최근의 독일 대학의 변화를 경험한 박철웅 박사와 함께 토론했는데 큰 도움을 받았음을 밝힌다.

의 자유로서, 이에 의거하여 대학교수들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연구능력에 의해 그 자질을 인정받게 되었고, 연구성과와 질이 교수를 채용하는 기준이 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대학교수들이 스스로를 학문적 교사라기보다는 연구자로서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왔다.

2. 독일 대학의 특성

이러한 독일 대학의 전통들은 다소 독특한 독일 대학만의 특성들을 낳았는데 이를 이해하는 것이 독일 대학의 문제와 개혁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 특성들은 현재 변화된 환경에 직면하여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성은 독일 대학의 졸업학위는 우리 나라나 미국에서 학사학위 이후 과정인 석사(Diplom 혹은 Magister) 학위이고, 학사과정이 없다. 석사학위가 전제가 되는 박사학위 과정(Promotion)과 박사학위 이후 과정으로 아주 까다로운 연구와 시험이 요구되는 '대학교수 자격시험(Habilitation)과정'이 있다. 이 과정은 원칙적으로 6년 과정이다. 하빌리타치온은 원칙적으로 교수직 초빙의 근거가 된다.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한 학교에서 석사, 박사 그리고 하빌리타치온을 마친 뒤 출신학교의 교수로 발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한 학교에서 석·박사과정을 마친 후 타대학에서 조교와 하빌리타치온 과정을 끝내고 제3의 대학에 교수로 초빙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교수로 부름을 받기 전까지 최소한 두 학교 이상에서 연구 경험을 갖게 하는 이러한 규정은 학문적 수월력과 안목을 넓히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두 번째 특징은 학과 선택과 수업에 관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김나지움(Gymnasium)이라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고 아비투어(Abitur)라는 졸업시험을 마치면 원칙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학교나 학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는 독일의 기본법인 헌법에 명시된 '직업선택의 자유보장'이라는 조항과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다. 그러나 후에 의과대학 등의 특수한 학과에 '입학허가 제한제도'(Numerus Clausus)를 도입하고, 입학시험의 한 방편으로 모든 대학들이 구두시험으로 치르는 심리학적 테스트를 받아들였다.

독일의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보통 13년을 공부하는데 이는 우리 나라나 미국의 12년보다 1년이 길다. 따라서 대학에서 교양과정이라는 수업은 없고 입학과 더불어 예외 없이 세분화된 전공에 대한 전격적인 수업이 이루어진다. 또 어떤 한 전공을 택하여 공부하면서 하나나 두 개의 부전공을 택하게 한다. 연구라는 것은 언제나 특화적이기에 석사과정은 시사적인 연구분야와 관련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기에 연구방향 소개에만 머무르는 학사과정이 없고 이론의 실천과 적용 그리고 장래 직업교육과 관련된 교육이 강조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초특화된 연구능력 배양을 강조하는 경향과, 전공의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기본지식 교육을 강조하는 경향 사이에 이 두 경향의 조화라는 제3의 시도가 이루어지는 중이다.

세 번째 특징은 약 260개에 달하는 독일 대학들은 모두 국립대학으로서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교수들은 종신 공무원으로 정년 때까지 그 임기를 보장받으며, 학생들은 등록금이 없고 대학과정이 철저히 무료라는 것이다. 이것은 학업연수나 졸업 후 다른 전공을 다시 공부하는 것에도 적용된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재정적인 이유로 자신의 학문적 재능이나 관심이 방해받아서 안 된다는 정신이 숨어있다. 대학이 국립대학이기에 대학의 행정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중앙정부는 기본 틀의 제시에 머무르고, 주정부가 대학정책에 상당한 자율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 주정부는 자치법과 대학법규가 허용하는 한 대학 나름의 자율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파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 독일의 일치된 교육정책의 설립이 쉽지 않고 독일 대학의 개혁에 장애가 되고있다.

3. 독일 대학의 문제점

이러한 독일 대학의 특징들은 '60년대 후반 이후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를 겪으면서 변화에 적응하는 개혁들을 실천해 왔다.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대학은 더욱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60년대 후반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는 대학조직의 팽창과 대학생 수의 급증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차대전 중의 물질적 상실감이 교육을 향한 열망으로 전이된 데 있다고 볼 수 있고, 교육은 국가의 번영을 보장한다는 인식에 기초한 정부의 적극적 교육부양 정책, 그리고 교육은 어떤 경제적 또는 직업의 실용성과는 무관하게 교육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고 제공되어야 한다는 '교육은 시민권'이라는 구호가 정치적 입지를 확보한 것도 대학 팽창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70년대 대학 입학생 수는 이미 대학의 정상적인 수용의 한계를 넘어섰으며, 대학 입학생 제한제도를 도입할 수 없는 헌법의 기본조항에 따라서 국가는 대학의 수를 수요에 맞게 늘려야만 했었다. 그러나 최근 40년 동안 대학 수가 2배로 늘어난 데 비해 대학생 수는 14배가 늘어났다.

대학생 수의 증가로 인한 대학의 급속한 팽창은 대학생들의 교육과정에서의 상실감을 낳았고, 교수와 학생 사이의 관계는 소원해지며 인격적인 관심과 배려의 관계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또 대학 팽창의 결과는 학업 중단자의 증가로 이어졌다. 특히 취업 전망이 어두운 전공의 경우 입학생들의 70% 이상이 학업을 중도에서 그만 두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학업년수의 장기화 현상이 나타났다. 독일 대학 졸업생들의 평균 연령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통계는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현재 독일의 대학 입학자들의 비율이 동일 연령층의 30%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대학진학의 동기도 학문적인 흥미보다는 실제적인 직업선택 목적이 우선한다. 이 결과 당연히 대학생들이 기대하는 방향과 순수학문연구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대학 당국의 방향 사이에 괴리

가 발생하게 되었다. 기존의 독일 대학제도에 대한 비판은 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지나치게 긴 학업기간
- 높은 학업 중단률
- 외국 학생들의 독일 대학 선호도 하강
- 대학의 양적 팽창으로 인한 대학의 시장화 및 개인적 소외현상
- 위의 현상으로 야기된 대학교수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진실성의 희석화
- 대학의 연구수준 저하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관련자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 해결 대안에 대해서는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4. 독일 대학의 개혁 방향

그 논쟁의 중심에는 다음의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는데, 과거 독일 대학의 전통에 따라 '엄격한 연구 지향적이면서 연구와 교육의 일원화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에 대한 굴종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대중교육시대라는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미국식 학제로 개편할 것인가'에 대한 개혁 방향의 차이는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일치점을 보이고 있는 두 가지 사항은 대학의 자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점과 대학들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자율성이란 지금까지의 국가의 재정적 간섭에서 탈피하여 재정의 자유를 획득하는 것으로서, 재정의 사용 용도를 국가에 의해 계획된 것이 아닌 대학이 자율적으로 책정,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대학들간의 경쟁도입의 관점은 대학간 연구지원, 학생 모집 등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성과와 업적을 기준으로 하여 교수들간, 연구소들간, 단과대

학들간의 위상을 차별화하는 것이다. 이미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대학 외부에서 인정받은 만큼 대학에서도 인정하는, 예를 들면 외부 연구지원단체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는 교수는 그것에 비례하여 대학의 지원도 받게 하는 실적제를 도입,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교수들의 실적을 평가할 객관적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관점은 대학간 또는 동일 전공별 경쟁제도를 도입하는 안으로서 이것은 결국 대학간의 우열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 점은 지금까지 모든 대학은 동일하다는 불문율을 위반하는 발상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따지고 보면 이 불문율은 이제 실상을 대변하지 못하는 이상화된 교시일 뿐이다. 사실은 대학간의 우열은 국제적 연계성, 특수영역 연구수준, 학생들의 학업년수, 연구활동 및 실적, 교수와 교육의 수준 등에 따라 존재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사실은 또 대학의 지표 설정이나 특성화를 위한 기초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대학간의 경쟁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대학별 특성화를 허락함과 더불어 신입생 선발에 이 특성을 적용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다. 이는 각 대학이 고유한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으로 앞에서 언급한 헌법의 기본법인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실현이라는 대목과 대치되기에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감나지움 졸업시험인 아비투어의 기능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감에 따라, 아비투어 외에 각 대학이 나름의 학생선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 문제는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지만 독일의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에서는 특수한 영역에 한하여 각 대학에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주고, 그 밖의 영역에서는 모종의 심리학적 테스트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학생의 자유로운 선발을 통해 대학이 제공하는 질과 요구수준에 학생들의 흥미와 능력이 잘 적응하게끔 계기를 마련하자는 시도인 것이다.

독일 대학개혁의 방향 중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미국식

학사과정의 도입이다. 대학생 수가 엄청나게 팽창함에 따라 연구중심이라는 독일 대학의 전통적 이념이 더 이상 지켜질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미국화를 경계하는 사람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있지만 이미 늘어나버린 대학생 수, 그 현상 자체가 이미 미국화의 하나라는 부인할 수 없는 시각과 더불어, 이러한 양적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확대와 변동이 불가피하다는 견해 또한 거세다. 따라서 학문적 동기나 연구수행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학생들간에 엄연히 존재하는 지성적, 동기적 차이의 현격함을 인정하고 몇몇 주(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와 함부르크)에서는 학사과정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또 구동독 지역의 대학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있다. 즉, 학사학위를 첫 단계의 졸업과정으로 의무화하고 두 번째 학업과정을 석사과정으로 정할 계획이다. 지금은 이러한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일련의 연장선상에 둘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질적으로 서로 다른 과정으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만 남아있다.

독일의 대학개혁과 관련하여 격렬한 논쟁중에 있는 주제가 '등록금 제도의 도입'이다. 여기에는 서로 공격적인 두 진영이 있다. 한 진영은 절대적으로 무등록금 주의를 고집하고 있는데, 이는 재능은 있지만 사회적으로 빈곤한 학생들이 재정적 이유로 교육받을 기회가 상실될 수 있다는 위험과 관련된 사회정치적 이유들을 내세우고 있다. 다른 진영은 이러한 단점을 장학금 제도로 방지할 수 있고 등록금 제도는 학생들의 학업의욕을 고취시키며 양질의 교육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에 맞서고 있다. 현재 몇몇 주에서는 학업년수를 지나치게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모종의 등록금 제도를 적용한 사례가 있다. 최근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연합정권은 그 해결책으로 공부를 우선 마치고 졸업 후 자신이 벌어서 등록금을 갚아나가는 안을 내어놓고 있다. 이 토론과 관련하여 등록금 수입을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국가로 환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사전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대학이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고, 그들이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성공을 유도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우세한 편이다. 그러나 이것이 실시되려면 지난 수십 년간 독일을 지배해 온 하나의 경향으로서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보다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 우선 의지해 버리는 복지시대 성향이 극복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오늘날 정보화와 세계화라는 단어로 대변되는 변화에 독일 대학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전공 위주의 학업에서 학제간 연구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있는데, 이러한 시도는 새로운 과목과 새로운 지식의 획득은 각 학문이 서로 근접, 접촉하는 영역에서 탄생한다는 깨달음에 기인한다. 현재 신설대학이나 구조조정을 크게 겪고 있는 구동독 지역의 대학들은 모든 교육과정이 학제간 연구적 특성을 살리며 기획되고 있다. 또 세계화 현상과 관련하여 다음의 개혁은 빠른 속도로 실천에 옮겨지고 있다. 그 하나는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학생들을 서로 교환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다양한 국가간에 통일된 교육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해 구상되었다. 이러한 학업방식은 '에라스무스(Erasmus)'와 '템푸스(Tempus)'라는 프로젝트에서 이루어지는데 한 학생이 다양한 유럽 국가들의 대학을 돌면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과목들을 선택하여 학업을 하고 어느 곳에서 졸업시험을 치러도 그 학력을 모든 회원국에서 인정하게 되는 제도이다. 또 공동의 박사학위 수여를 위한 계획도 진행중이다. 다른 하나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제적 연구협력의 가능성이 급속도로 높아진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다. 그 범위는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주된 대상이지만 최근 미국과 기타 지역의 국가들까지도 포함된다.

개혁을 향한 노력과 아이디어들은 실천과정에서 자주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대학개혁의 주창자는 독일 학술원이고, 이미 1976년부터 개혁을 위한 권고

문'에서 교육과정의 차별화, 학업년수의 단축, 대학구조의 개선 등의 대안들을 제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개혁의 가장 큰 어려움은 법적인 환경으로서 연방정부의 개혁안들이 각 주정부와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실현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1989년 연방정부는 새롭게 구상된 대학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긍정적 반응을 얻은 가운데 통과되었고 각 주정부는 주 고유의 법을 제정하여 이 법안을 보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안은 각 주가 대학간의 경쟁과 독자적인 대학발전을 실로 가능하게끔 하는 것으로서 멀지 않은 장래에 실현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독일 대학개혁의 실현을 고무시키는 자극으로, 독일의 대통령은 1997년 11월 5일 행한 연설에서 특별히 대학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피력하였다. 이는 대학개혁의 방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개혁이 이 방향으로 더욱 활기차게 진행될 것이며, 이미 진행중인 개혁안들은 가속도가 붙을 것이고, 목표한 것과 같이 실현시킬 수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 사회와 학생들의 이질적인 능력과 취향을 수용하기 위한 대학제도의 차별화, 다양화
- 모든 학생들이 학자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짜여진 현재의 교육과정의 단순화
- 대학간의 경쟁 독려
- 대학별 신입생 독자적 전형기준과 선발
- 모든 교육제도의 더욱 명확한 가치관과 성과지향성의 추구 **▶▶▶**

황승연

경희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자이브뤼켄 대학에서 사회변동을 전공하여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희대 사회과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며 현재 동 대학 신문방송국장, 행정자치부 전자정부 정책자문위원, 한반도정보화추진본부 지역정보화기획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정보사회의 이해』, 『네트워크 트렌드』, 『SPSS 사회조사분석』(이상 공저), 『글로벌 네트워크』(공역) 등이 있다.